



순천대 “불참” 재확인...전남도 ‘의대 공모’ 난항 불가피

순천대 “의대 설립, 교육부가 진행해야” 단독 추진 고수
“現정부내 신설 힘 모아야” 소모적 논쟁 중단 요구 확산
“지속적으로 만나 공모 필요성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

김영록 전남지사의 대도민 호소와 전남 서부권과 전남도의회의 잇따른 대승적 결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순천대·순천시 등 동부권의 반대로 전남도의 공모 방식을 통한 단일의대 선정 계획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9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전남권의 의대 신설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동부권의 독자 추진 방침으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남도·순천대 등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이병은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등과 의대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날 김 지사는 기존 ‘통합의대’에서 공모 방식을 통한 ‘단일의대’로 변경한 배경과 공모 절차 및 공정성 담보 방안,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순천대·순천시는 “전남도가 대학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대 설립 절차는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서 진행해야 지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전남도의 의대 공모 불참과 독자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순천대는 전남에도 의대유치추진단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의 의대 선정 공모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양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김 지사가 지난 15일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출 목포시장 등 서부권과 회동을 가진 이후 목포대는 공모

여로 입장을 선화한 바 있다. 또한 전남도의회 역시 지난 17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지만 동부권의 독자 추진 방침으로 전남도의 의대 공모 방식 추진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경우 전남권의 의대 신설 자체가 좌초하는 것이냐는 우려마저 확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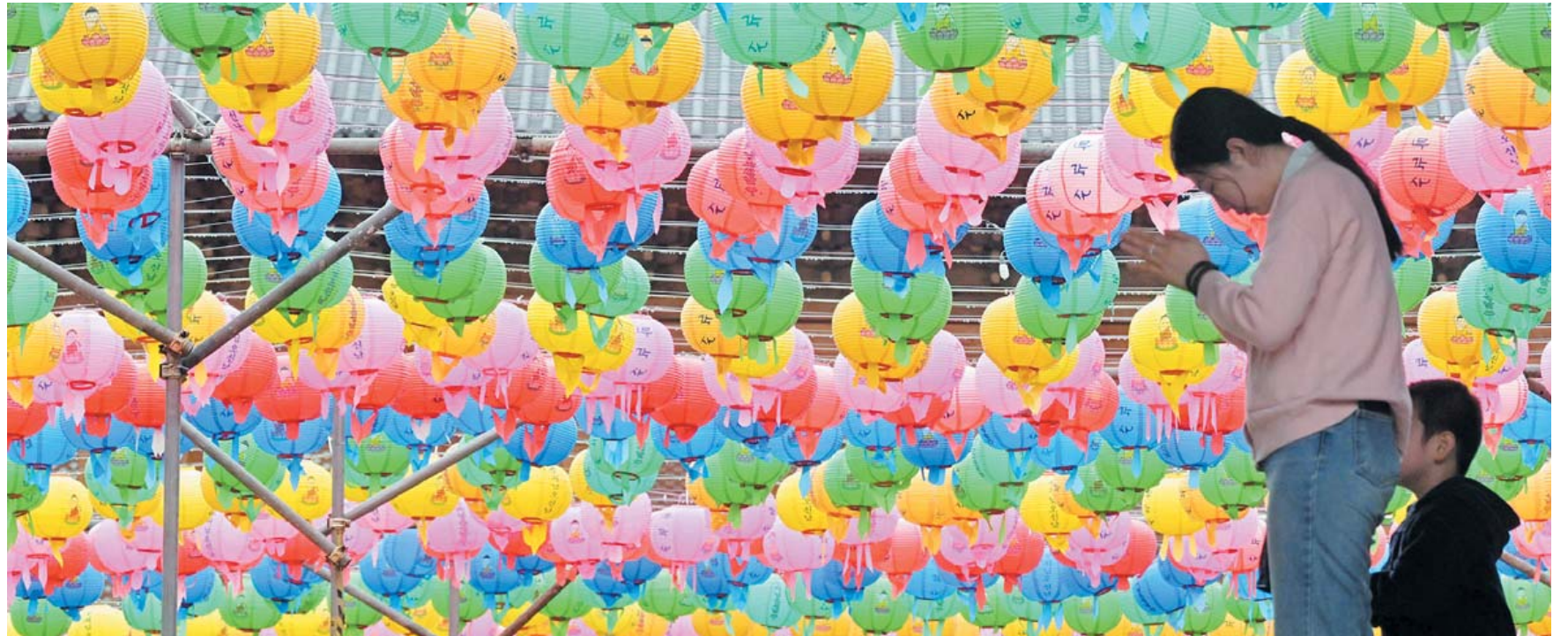
전남도가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의대 유치 경쟁의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 ‘공모 카드’를 내놓았음에도 ‘지역 이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정부가 이를 발미로 의대 신설 방침을 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결국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는 대명제하에 현 정부 임기 내에 의대 설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동부권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절박함은 김영록 지사가 지난 17일 발표한 호소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지사는 “현재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신청해야만 하는 촉박한 일정에 있다”며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남도의회도 같은 날 차영수 의회 운영위원장(강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립의대 신설은 도민의 힘을 결집해 30년 만에 이뤄낸 소중한 기회로 현 정부 임기 내



소원 담은 오색 연등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5월15일)을 앞두고 광주 서구 무각사에 소원을 담은 화려한 오색 연등이 내걸려 이곳을 찾은 불자가 합창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지금과 같은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되면 평도, 매도 놓치게 될 것이다.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이 하나 된 목소리로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공모를 수행할 용역기관 선정 추진 과정에 순천대가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모는 의대 설립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도민의 이해를 구해 추진하겠다”고 공모 방식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순천대 총장, 순천시장과 첫 만남이었음에도 큰 틀에서는 전남권 의대 유치에 함께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공모 방식에 대해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순천대 등 동부권과) 꾸준히 만나 공모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尹대통령-李대표, 첫 ‘영수회담’ 열린다

주중 예상...민생회복지원금·의정갈등 등 의제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는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이 대표와 전화 회화를 갖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통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첫 양자 회동이 성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도훈 홍보수석은 이날 브

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들고 대통령을 만나러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의제 조율이 돌입했으며, 회

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의 핵심은 4·10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수 기자

24일 무안 소음 대책 토론회...‘군공항 이전’ 전환점 될까

소음 영향 분석·대책, 발전 구상 등 제시...여론 변화 주목
반대 단체 집회신고에 긴장감 고조...羨시장 참석설에 촉각

군공항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가 24일 무안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답보 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광주시·전남도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드러나 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무안지역 내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무안군민의 여론 변화를 이끌어낼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무안군 무안읍 소재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장(본관 1층)에서 군공항 이전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광주시·전남도·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무안군민과 인근 시·군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연구원이 소음 영향 분석 및 대책 등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전남연구원은 무안국제공항 주변 지역 발전 구상을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나주몽 전남대 교수, 김재철 한서대 교수, 김주석 대구정책연

구원 공간교통연구원장, 허태성 유신부시장, 박영환 나노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 대표이사, 민간전문가 토론을 벌인다.

이어 토론회 참석 무안군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항 문제 5개항 공동발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시 양 시·도지사는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민간·군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통·설득 ▲소음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 공동 개최 ▲무안군 수용성 제고 지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및 인접 시·군 공동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은 초당대학교 입구에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다.

범대위 측은 군공항 이전 반대 피켓시위를 계획 중이며 토론회를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남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영록 전남지사의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의 최근 토론회 참석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대위 측은 집회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 시장이 이탈리아 방문을 마치고 21일 귀국함에 따라 강 시장의 토론회 참석 여부는 22-23일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강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토론회에 참석할 경우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범대위 측과의 몸싸움 등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군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단 토론회 당일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민주,국회의장·원내대표 경쟁치열 4면
흑산도 흥어축제 내달 4일 개막 9면
U-23축구,오늘밤은명의한일전 16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시민 소통 플랫폼

광주온(ON)

" 시민 모두의 의견을 묻고 듣기 위해 소통을 ON 합니다."

묻는다

시민 정책참여단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광주시가 설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설문참여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시민 정책참여단

만14세 이상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가입하기 : 광주온(ON)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스캔

듣는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공감하여!!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제안내용 : 불편·고충사항 해결방안, 정책아이디어 등

시민권익위원회

제안요건이 충족(공감50)되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심의하여 시에 정책권고합니다.
※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안 기다립니다.